

국회교육위, 등록금 환불 지원... 교육부 예산 2718억 증액

1차 회의 통해 3차 추경 수정안 의결 민주당, 현금 아닌 간접지원 공감 향후 예결위 심사서 감액 가능성도

대학등록금 환불 일부 지원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교육부 예산이 2718억원 증액됐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감액된 767억원을 살리는데 이어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총 2718억원을 증액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학등록금 환불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강행에 반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시스

해 모든 의사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의 불참 속에 열린 교육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간접 지원을 해야 하는 것에는 모두 공감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대학 등록금 환불에 대한 엄중한 요구가 있음에도 추경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며 “이와 같은 환불 요구에 대해 국가가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고 예산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충실하게 자구노력을 펼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2학기 대학 미등록 우려가 있다”며 “학생과 대학 간 등록금 반환 갈등이 장기화하면 우리 대학 교육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은 교육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교가 등록금의 10% 정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해야 하고, 자구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는 대학에 교육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대학에 총 61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다만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에서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에 관여할 수 없고, 대학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등록금 역시 각 대학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실

질적인 지원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체 회의에서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다”면서 “그 부분은 대학과 학생들이 적절한 안을 마련해서 해야 한다”고 말해 간접지원 방식으로 등록금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관련 상임위원 교육위에서 증액안이 처리됐으나, 향후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다시 감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등록금 반환 비용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는 요구에 “지방의 어려운 대학이 현실적으로 있어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대학 기회균형 선발 신입생 3000명 증가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신입생 12.6% 기회균형 전형 평균 강사로 4600원 늘어 6만6000원

올해 대학에서 기회균형 전형으로 뽑은 신입생이 지난해에 비해 약 3000명 늘었다. 대학 시간강사 평균 강사비는 국공립대를 주축으로 크게 늘어 전국 평균 전년보다 4600원 늘어난 6만6000원을 기록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30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시에는 전국 416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신입생 선발 결과, 강사 강의로 등 62개 항목이 포함됐다.

올해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은 전체 신입생 34만5031명 가운데 12.6%인 4만3364명을 기회균형 전형으로 뽑았다. 지난해 같은 전형으로 뽑힌 신입생 비중은

11.7%로 1년 새 2999명이 늘었다.

기회균형 선발 전형에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특성화고 졸업자·특성화고졸 재직자·농어촌 지역 학생 등을 뽑는 특별전형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과 사립대는 기회균형 선발 인원 증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주요 대학이 몰려있는 수도권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 비율은 9.8%로 전체 평균(12.6%) 대비 2.8%포인트 낮았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비율은 14.4%로 평균보다 1.8%포인트 높았다. 국공립대학의 기회균형 선발 비율은 16.0%로 11.5%로 나타난 사립대학보다 4.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강사료는 지역 국공립대 주축으로 대폭 상승했다. 올해 1학기 강사 강의로 평균은 6만6000원으로 지난해 6만1400

원보다 7.5%(4600원) 높아졌다. 국공립대 강사 평균 강사료는 지난해보다 1만2300원(16.7%) 늘어 8만6200원이 되면서 강사료 상승을 이끌었다. 사립대는 5만5900원으로 시간당 강사료 증가액은 1600원(3% 인상)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당 강사료 증가가 두드러졌다. 올해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당 강사료는 7만1000원으로 6만4800원이었던 작년에 비해 9.5%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의 시간당 강사료는 5만6400원에서 5만9000원으로 4.6% 올랐다.

대학이 기업과 연계해 만드는 학과·교육과정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정 기업의 채용 우대를 전제로 운영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35개로 1년 사이에 7곳(25%) 늘었다. 학생 수는 1948명으로 2019년(1506명)보다 29.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진 기자

“성적 경쟁 막을 것... 석차백분율 제도 개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자회견

교육과정 차원 서열화 문제 지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지역 일반고 입시에서 석차백분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과 중학교까지는 성적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진정한 전인적 교육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겠다”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석차백분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임기 취임 2주년을 맞은 조 교육감은 이날 ‘백만 개의 교실, 하나의 공동체’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혁신교육 2.0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이달로 2기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조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와 국제중이 학교 체제 차원의 서열화 문제라면 입학전형 방법인 석차백분율 제도는 교육과정 차원의 서열화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제2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서울시교육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서울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캡처

석차백분율이란 학생들이 졸업할 때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등수로 매겨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이다. 교육계에선 석차백분율을 두고 ‘성적 줄 세우기’라며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해왔다. ‘자유학기제’ ‘성취평가제’와 정면으로 대치된다는 게 교육계 시선이다.

현재 중학교에는 지난 2012년 성취평가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고나 자율형공립고 등 교육감 선발 후기고 입학 등 고입에서는 여전히 내신과 비교과 등을 토대로 한 석차백분율이 활용되고 있다. /이현진 기자

국민대, 통일통합교육 전문과정 신설

한반도미래연구원과 업무협약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과 교육학과가 교육철학인 공동체주의와 실용주의 정신을 대한민국 전역에 전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일통합교육 전문과정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국민대는 이를 위해 지난 24일 한반도미래연구원과 교육학과 간의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정원 원장, 김현진 학과장, 여현철 교수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통일 관련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통일통합교육 전문가’ 이수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본 협약식에서 제안한 이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학과에 개설된 ‘통일교



국민대 본관

육론 ‘통일한국과 교육정책’ ‘남북한 교육환경’ 등 3개 과목 ▲법학과에 개설된 ‘통일과 법’ ‘북한법’ 등 2개 과목 ▲교양대학과목인 ‘통일시대 지성인으로서의 역할’ ‘국제관계의 이해와 통일’ 등 총 7개의 통일 관련 강좌 중에서 4과목을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미래연구원이 제시하는 통일관련 활동 및 탈북학생과의 멘토링 사업 등을 진행해야만 한다.

/이현진 기자

인천대

전염병 주제 사진전 개최

인천대는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 인천시와 함께 한 달 동안 인천 소재 가천대 길병원 갤러리에서 ‘한국의 전염병 분야 해외원조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사진전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전 인류에게 중대한 문제가 될 것임을 고려해 전염병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염병을 주제로 기획됐다.

이번 사진전에는 정부 프로젝트, 민간 개발원조 단체 사업, 해외봉사단 활동, 외국인 초청연수, 인도적 지원, 혁신기술 활용사업 등 한국이 그간 개도국에서 해 온 다양한 형태의 전염병 지원 사업에 관한 사진 26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삼육대 김일옥 학장, 마약퇴치 유공자 선정

(간호대학)

제 34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마약 퇴치 공로인정, 국무총리 표창

삼육대는 김일옥 간호대학 학장(사진)이 ‘제34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유공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김일옥 학장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통해 불법 마약류 퇴치에 기여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마약퇴치 유공자 정부포상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4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중독예방 및 재활교육 전문가인 김



학장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과 이사, 산하 마약퇴치연구소 부소장 등을 역임하며, 중독 재활실습 지침서, 교육과정을 개발

하고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삼육대 건강과학특성화사업단 부단장으로도 활동하며, CK-II(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지원 공모로 대학에 중독 상담자 교과목을 개발했고, ‘중독예방교육전문가양성과정’ 교육과정과 교재도 개발해 운영했다. /이현진 기자